

동계특별법 시행령

# 도 요구 무산 가능성

## 김항식 총리 “구체적 수치 규정 못해”

김항식 국무총리가 23일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구체적 수치를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혀 이달말 공표될 시행령에 국고 보조를 반영 등도 요구사항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선 권성동(새누리당·강릉)

의원이 “올림픽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부처간, 개최 지자체간 불협화음으로 시행령이 부실하다”며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은 본 법과 똑같이 무성의하게 규정돼 미흡한 시행령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시행령에는 올림픽 공원, 대회물자 창고, 관람객 한파 대비 지원시설, 대회조직위 사무실, 수송통제센터, 차량 부대시설 등이 제외됐다”며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과 올림픽특구 내 경관 형성 정비 대상에 대해 각각 70%와 50%

이상의 국비 지원사항이 삭제된 채 입법예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구체적인 수치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고 평창올림픽이 국가적 행사인 만큼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간 이견은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상정되더라도 이견조정이 안될 가능성이 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시행령공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안은복·서울/박지은

## ‘올림픽 시설 70% 국비지원’ 이번 주 관철하자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국비 70% 지원 관철을 위해 이번 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 안에 도 요구사항 포함 여부가 26일 차관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 및 올림픽 특구 내 경관 형성 정비 대상에 대한 각각 70%와 50% 이상의 국비 지원, 올림픽경기장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등은 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역시 조항들이 초안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럴 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정부를 압박하며 ‘강원도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올해는 강원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다. 일차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등 강원도 3대 현안도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주변의 여건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 가뜰이나 정치적인 역량이 취약한 강원도로서는 동계올림픽

시설 국비 70% 이상을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관철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23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답장으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을 강력하게 질타한 이후 정부의 반응이 그래서 주목된다. 권 의원은 “시행령에 대회 관련 지원비율 등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행령에서도 부실하게 지원조항을 담으려는 행태가 엿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살길은 우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집력을 보여주는 데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9석을 석권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 없다. 이로 인해 전체 국회의원의 3%에 불과한 도 출신 국회의원 9명의 팀플레이가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5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채위 부의장에 재선의 정문현(속초-고성-양양), 권성동(강릉)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원내 부대표에는 김기선(원주 갑) 의원을 임명했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정파, 전현직 등 모든 직위를 떠나 큰 항아리에서 정치적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가 올림픽특별법 명시 내용 무시했다”

권성동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서 무성의한 시행령 제정 질타 “특별법서 시행령 거론한 것은 본법 부족분 보강하라는 의미”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을 정부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은 23일 김항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의 국비 지원 대상, 지원비율,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했지만 시행령은 이를 어기고 무성의하게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제28조 2항은 대회 관련시설의 국비 지원과 관련 ‘지원 대상·지원 내용·지원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대회 관련시설 및 올림픽특구 내 경관 형성 정비 대상에 대한 각각 70%와 50% 이상의 국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라는 법 취지다.

반면 시행령은 제16조에서 ‘(대회 관련시설 국비 지원과 관련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뒤흔어, 두무뎡술한 조항만을 두고 있다.

특별법에서 시행령을 거론한 것은 본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부족분을 보강하는 차원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축소했다는 의미다.

현재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

령은 26일 차관회의를 앞두고 부처간 이견조율 중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올림픽 관련 시설의 50~70% 이상의 국비 지원, 올림픽경기장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올림픽파크, 동계스포츠컴플렉스 건립 등도 핵심 요구사항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졌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대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김항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 대사인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차질없는 지원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민원기자 wanki@